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
- 혐오국가와 인권의 가치는 병존할 수 없습니다 -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난민이란 박해의 위협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기에 다른 나라에 머물 수밖에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유엔의 인권레짐이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듯이 현재의 난민제도도 유대인 학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찌의 학살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난 유대인들은 많은 유럽국가들은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이유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 학살을 방조했던 과거의 대한 반성이 유엔의 난민제도 확립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를 거쳐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의 위협이 있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할 유럽의 역사적 선례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난민과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뉘레야 뉘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법통을 이어받은 상해임시정부는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들이 만든 정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몇 안 되는 유엔의 공식 난민지원기구 중 하나인 유엔한국재건기구가 10년 가까이 한국 내 구호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을 피해 제주도민들은 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고, 유신독재, 군부독재의 꺾박을 피해 많은 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자 유일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전형적인 정치적 난민이었고 미국 등의 국제적 보호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성립과 존립, 그리고 그 지도자와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기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낮은 난민인정율에서 드러나듯이 국제기준과는 많이 동떨어져있는 난민인정기준,

난민심사관과 통역의 난민면접내용의 조작이 판결을 통해 드러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조차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 황당한 이의신청절차

난민신청자의 생존, 구금을 통한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 사실상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상황 등 여전히 국제적으로 창피할 정도의 부실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록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보호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경제

력,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난민제도와 관련하여 밝힌 입장은 어떻게 난민을 좀 더 잘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난민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난민심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워낙 난민보호에 인색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보호해야 할 난민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난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유능함, 책임감/도덕성, 겸손한 태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정부는 부실한 제도를 더욱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난민의 인권보호를 방치하는 무능함,

이 모든 문제를 사실상 난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

일부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뒤에 숨는 잔인하고 비겁한 태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의 의미, 난민 보호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이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권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라 하더라도 세계여성의 날, 세계장애인의 날에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보호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성범죄의 급증, 장애인 부정수급의 급증과 그 대책만을 논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사실상 난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수를 들먹이며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엄정심사와 브로커 단속이라는 입장만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외국인혐오, 난민혐오를 조장했습니다.

가난과 싸울 의사나 능력이 정부는 가난한 자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난민문제와 싸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부는 난민과 싸웁니다.

그 성립과 존립, 그리고 그 지도자와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기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꾼다는 헌 정부에서 난민들의 보호에 어떤 진향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지는 자명합니다.

난민 탓과 국민 탓을 오가며 난민에 대한 학살을 방조하고 난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실상 교사하는 무능, 무책임, 잔인하고 비겁한 태도의 정부는 우리의 정부일 수 없습니다.